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에 대한 수출업체 인식 연구

김경필¹ · 김성훈^{2*}

¹한국농촌경제연구원, ²충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The survey analysis on the recognition of agro-food exporter to promote exportation in Korea

Kyungphil Kim¹, Soungun Kim^{2*}

¹Center for Agro-Food Policy Research,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Seoul 130-710, Korea

²Dept. of Agricultural Economic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305-764, Korea

Received on 11 August 2011, revised on 26 August 2011, accepted on 19 September 2011

Abstract : Korean government has introduced various programs to support exporters for the promotion of agro-food, including subsidizing the part of cost of transportation which is one of main supporting programs welcomed by exporters. However, the circumstance of global trade requires the change of government policy to promote exportation.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conduct the survey to analyze the recognition of agro-food exporters about the current promotion programs, and to suggest the findings to improve the Korean government program. The survey was conducted for 200 Korean agro-food exporters and 55 samples were taken for analysis. The results of analysis suggests followings: First, most of exporters still prefer the direct subsidy program, Second, however, many exporters also understand the necessity of the program to enforce the infrastructure for exportation and require that program, which will be the main promotion program in Korea.

Key words : Export promotion, Transportation cost, Infrastructure

I. 서론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은 정부가 수출업체 및 농가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주요 수출지원사업 중의 하나이다. 이 중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수출농산물의 선별비와 포장비, 운송비 등 물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수출업체들은 수출 증대 효과에 중요한 사업으로 평가하고 있다.¹⁾

반면, 또 다른 수출지원사업인 수출인프라 강화사업은 수출활동과 관련된 인프라 부문을 지원함으로써 농식품 수출 증대 및 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을 하고 있으며, 안전 관리지원, 수출보험, 공동물류센터 운영 등의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 예산은 수출진흥사업 보조금 지원부문의 57.9%를 차지할 정도로 비율이 높으

며(2010년 기준), 2000년 이후에 지원예산이 117.7% 증가할 정도로 빠르게 증가되어 왔다.²⁾

하지만, 수출판매촉진사업 지원 사항들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상호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으며, 해외시장에서의 출혈 경쟁 및 수출 상품의 품질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개선할 점이 많다.

또한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 지원은 보조금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향후 국제협상 타결 결과에 따라 지원 금액이나 방식에 따라 이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DDA 농업의장 초안(2008.12)에 따르면 수출보조금은 선진국은 2013년까지, 개도국은 2016년까지, 개도국 우대 시에는 2021년까지

1) 수출업체들은 수출확대에 효과가 있는 사업은 수출물류비 지원 37.1%, 국제박람회 참가 26.8%, 운영활성화 자금 9.6% 순으로 응답함(농수산물유통공사 조사결과).

2) 보조금 지원의 나머지 비율 42.1%는 해외시장개척사업이며, 농식품 수출기반조성사업, 수출성장동력 확충사업, 해외마케팅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Corresponding author: Tel: +82-42-821-6746

E-mail address: soungunhunkim@hotmail.com

철폐되도록 되어있어 향후 제도 보완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수출지원의 문제점과 향후 여건 변화 전망에 따라 정부에서는 수출지원사업의 목적을 수출증대뿐만 아니라 수출기반 강화에도 두고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수출물류비를 합산하여 지원하는 총액한도제를 도입하였고, 앞으로도 수출업체와 생산농가의 경쟁력 강화와 규모화를 위해 기본물류비 지원수준의 단계적 축소와 지원대상의 수출실적 요건을 강화하며, 수출물류비는 점진적으로 축소하되 신시장 개척 등의 수출인프라 강화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³⁾

이러한 정책방향 변화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가장 크게 영향을 받게 될 수출활동의 주체는 수출업체들이다. 정부의 수출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수출 보조금 감축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수출을 증대시키고 수출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효과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수출업체들의 의식과 수용 가능성을 최대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농산물 수출 증대방안에 대한 연구들은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지만 판매촉진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이나 개선방향을 제시한 연구는 많지 않다. Kim과 Park(2005)는 수출물류비를 수출시장별로 차등 지원하고, 수출물류비 지원의 기준이 되는 수출실적을 품목별 여건에 맞게 조절하며, 지자체의 물류비 지원은 수출단지나 유통시설 관련 지원 등으로 전환할 것 등을 주장하였다. Choi 등(2009)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수출지원 역할이 적절하게 분담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아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국내업체간 경쟁이 심화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수출지원 창구를 단일화하고 지원의 중복성을 줄일 것을 주장하였다.

한편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의 지원성과를 분석한 연구 중 Kim과 Kim(2011)은 수출물류비 지원금액과 수출실적과의 상관관계가 적은 품목은 인삼음료와 홍삼차, 파프리카, 국화, 선인장류, 장미이며, 수출물류비 지원의 목적이 수출을 증대시키는 것이라면 상관관계가 적은 품목들의 지원을 감축시키거나 지원순위를 후순위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Park과 Cho(2010)는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 중에 하나인 농수산물 수출보험이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수출보험 인수액이 많을수록 수출업체나 생산자들의 위험을 경감시켜 수출이 증가한다는 것을 보였다.

Kim과 Han(2010)은 판매촉진사업의 수출인프라강화사업에 해당하는 원예전문생산단지 육성사업과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이 수출물량의 안정적 확보와 품질관리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Im 등(2011)은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원예부문의 수출결정요인을 분석하였으며, 수출물류비 지원, 비관세 장벽 등 정책 변수를 고려한 수출증대 영향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외국의 농식품 수출지원제도에 대해 Eor 등(1994)은 외국의 농산물 수출지원 정책의 특징과 문제점을 제시했고, Lee 등(2010)은 중국과 일본의 농산물 수출지원 정책을 분석하고 한국의 수출경쟁국으로서 중국과 일본의 수출지원정책이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수출지원사업에 대한 연구는 지원사업 개선의 필요성 제기, 효과 분석들이 주요 내용이고, 수출업체들의 의식을 조사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수출활동을 주체적으로 수행하는 수출업체들의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제도개선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으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II.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 지원 동향

1. 지원체계

농식품 수출지원사업은 농식품부에서 총괄적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 지원하고 있는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은 해외시장개척사업, 운영활성화자금 지원사업과 함께 지원사업의 큰 축을 구성하고 있다(Fig. 1 참조).

중앙정부의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은 수출업체 및 생산농가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조해주는 수출물류비 지원사업과 수출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기반 강화를 위한 수출인프라 강화사업으로 구분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으로는 수출교육 및 컨설팅, 수출단지조성 및 경영지원, 해외시장 개척 및 마케팅, 수출물류비 품질인증 지원이 있다. 한편 중앙정부의 수출물류비 지원과 수출인프라 강화 지원사업은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내용들과 중복

3) 기본물류비 지원수준은 '08년 25%에서 '11년 10%로 감축되었으며 (단일부류 10만불), 지원대상 수출실적 요건도 '11년 FOB 기준 전체부류 20만불에서 '12년 단일부류 30만불, '13년 단일부류 40만불로 늘어날 예정임(농림수산식품부, 201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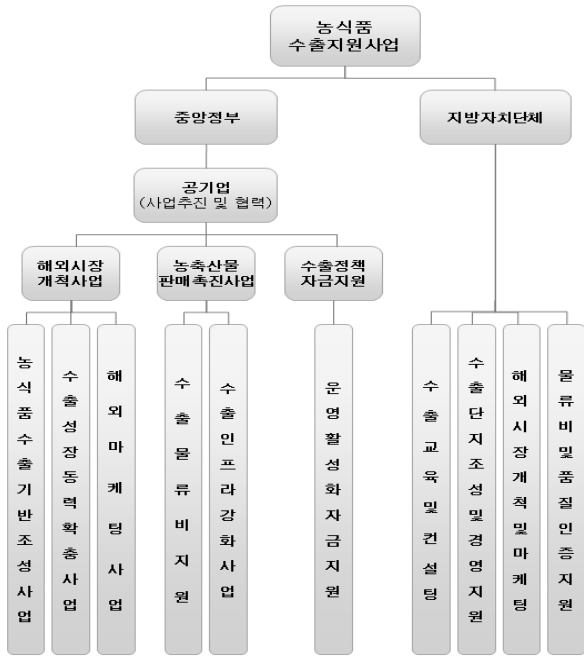


Fig. 1. Export supporting system in Korea.

자료: 최세균 외, 농식품 수출 증대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9)

Table 1. Categories of promotion programs for agro-food exportation (unit: %)

구분	비율
1. 해외시장개척사업	31.4
○ 농식품 수출기반조성 사업	5.7
○ 수출성장동력 확충사업	9.0
○ 해외마케팅 사업	16.7
2.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43.3
○ 수출물류비 지원	34.5
○ 수출인프라강화사업	8.8
3. 수출진흥 사업비	25.3
합계	100.0

주 1) 2010년 수출진흥사업 예산 95,945백만원에 대한 비율이며, 수출진흥사업비는 사업추진을 위한 인건비 등임

2) ()는 세부사업별 예산 비율임

자료: 농림수산물식품부·농수산물유통공사(2011.4)자료를 재정리함

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농림수산물식품 해외시장개척사업은 농식품 수출기반조성 사업, 수출성장동력 확충 사업, 해외마케팅 사업을 포함하며, 수출진흥사업 예산의 31.4%를 차지한다.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의 예산 비율은 총예산의 34.5%로 수출인프라 강화사업 지원예산 비율의 8.8%보다 매우 높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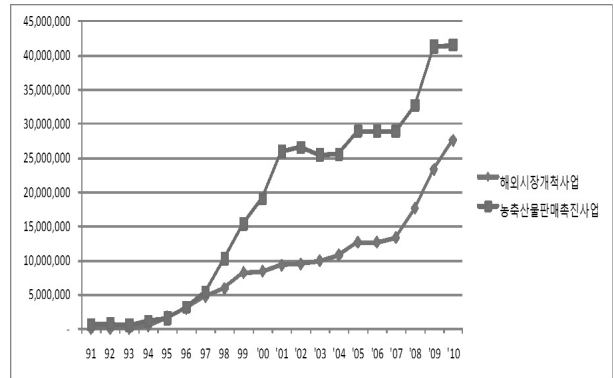


Fig. 2. Trend of supporting volume of programs for the promotion of agro-food exportation (unit: thousand won).

자료: 농림수산물식품부·농수산물유통공사(2011.4)자료를 재정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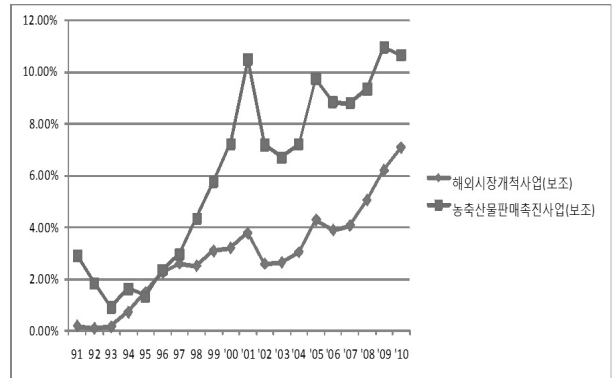


Fig. 3. Trend of ratios of programs for the promotion of agro-food exportation (unit: %).

자료: 농림수산물식품부·농수산물유통공사(2011.4)자료를 재정리함

2. 지원 실적

농축산물 수출지원사업 지원 총액은 1991년 233억원에서 2000년 2,639억원, 2010년 3,902억원으로 빠르게 증가해왔다. 2010년 해외시장개척사업 지원액은 276억원으로 2000년 4.5억원 대비 226.9% 증가했고,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은 415억원으로 117.7% 증가했다.

수출지원 총액에서 해외시장 개척사업의 비율은 1991년 0.19%에서 2010년 7.07%로, 2010년 비율은 2000년 대비 3.87%로 크게 증가하였다.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 비율도 1991년 2.9%에서 2010년 10.6%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운영활성화 자금 지원비율은 2010년 82.3%로 낮아졌으며, 2000년에 비해서는 7.29%p 낮아졌다.

4) 2010년 수출진흥사업 지원 기준

3. 지원 기준

중앙정부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의 수행근거는 WTO 이행특별법과 농업·농촌 기본법 제35조이며, 재원은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이다.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의 종류는 수출물류비 지원사업과 수출인프라강화사업으로 구분되며, 2011년 수출인프라강화사업의 세부사업으로는 수출보험 지원, 수출국 검역관 초청, 수출농산물 안전관리 지원, 수출농산물 선도유지 지원, 선진지 연수, 인삼 중국품질표준 등록, 수출국 상표등록 지원, 수출전문인력 육성, 국내외 농약 등록지원, 신시장 개척지원, 해외물류기반구축,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지도점검 등이 있다.

수출물류비 지원대상은 등록 신청일 기준 과거 1년 이내의 단일부류 수출액이 FOB 기준 20만불 이상인 법인 또는 개인(수출자)이고, 지원품목은 국내산 과실류, 채소류, 화훼류, 김치류, 축산물, 인삼류, 전통주, 장류, 차류, 쌀가공품 등 10개 부류이다. 가공품의 경우 주원료가 국산(막걸리 예외)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주원료에 외국산을 혼합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수출물류비 지원항목에서 기본물류비는 “수출물량×표준물류비의 10% 이내(품목별 국가별 지원단가)”에서 지원한다.⁵⁾ 수출물류비 인센티브 항목의 지원내용은 기본물류비 외에 추가적으로 신시장개척 인센티브 지급대상일 경우 표준물류비의 10%를 추가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원예전문생산단지 인센티브는 원예전문생산단지 평가결과 최우수 단지는 표준물류비의 12%, 우수단지는 8%를 추가 지원하며, 당해년도 원예전문생산단지에서 생산 및 수출된 물량이 해당된다. 수출선도조직 인센티브는 선도조직 운영실적 평가결과 최우수조직은 표준물류비의 12%, 우수조직 8%, 일반조직 3%를 추가적으로 지원한다. 공동대표 브랜드(휘모리) 인센티브는 휘모리 품위규격에 적합하게 수출한 물량에 대하여 표준물류비의 10%를 추가 지원한다.⁶⁾

- 5) 표준물류비는 품목별, 국가별로 산정한 kg당 실 소요 수출물류비를 말함. 기본물류비 지원단가는 표준물류비의 일정비율로 kg당 지원키로 한 금액을 말함. 기본물류비는 품목별, 국가별로 수출된 중량에 기본물류비 지원단가로 계산되는 금액임.
- 6) 수출물류비는 농식품 수출에 소요되는 집하운송비, 선별·포장 인건비, 포장재배, 국·내외 운송비임. 수출실적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제11호에 따라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출통관액, 입금액, 가득액과 수출에 제공되는 외화획득용 원료·기계의 국내 공급액임. 등록신청일은 수출물류비를 지원받기 위하여 매년 처음으로 농식품 수출업체가 수출실적 증빙을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제출한 날을 말함. 단일부류는 지원부류 각

수출물류비 신청은 수출물류비 지원대상 신청자가 매월 5일 이내에 전월말 기준 수출실적을 품목별로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수출지원시스템에 해당 지자체 수출량 및 국내 운송지역을 구분하여 입력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동시에 수출물류비를 지원받는 수출업체는 수출실적 증빙자료를 유통공사로 제출하고 유통공사 지사는 수출자가 제출한 수출신고필증 사본 및 제 증빙서류와 수출지원시스템 입력내용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본사에 통보한다. 유통공사는 수출물류비 지급액을 산출하여 지사에 통보하고, 지원내역을 농식품부에 매월 보고한다.

한편, 정부는 수출지원제도 개편 필요성에 따라 2010년에 수출물류비 지원의 총액한도제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수출물류비를 지원할 때 표준물류비를 기준으로 지원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비율 총계의 한도를 제한한다. 중앙정부의 지원대상은 수출물류비 지원대상과 같고, 지자체는 수출실적과 상관없이 지자체 관내에서 생산(제조)된 농식품을 수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품목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품목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지자체가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필요시 자체지원 품목을 별도로 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지원한도는 표준물류비의 35%로 매월 수출물량 기준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한다. 중앙정부의 지원비율은 “수출물량×표준물류비의 10%” 이내이며, 지자체는 “수출물량×표준물류비의 25%” 이내이다. 유통공사와 지자체는 수출지원시스템(ISP)의 지원금액을 확인한 후 수출업체에게 수출물류비를 지급한다. 지자체가 수출물류비 한도를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수출물류비를 감액하여 지원하여 전체 지원 규모를 관리한다. 수출농가 지원액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지원하되 지원 비율을 점차 축소하고 수출농산물 생산 인프라 구축에 예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III.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에 대한 수출업체 의식

1. 조사개요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에 대한 수출업체 의식 조사기간

각을 지칭함. 지원품목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수출물류비지원 신청품목에 대하여 「수출물류비 지원대상 품목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여부를 심의함.

Table 2. Overview of samples for survey (unit: %).

수출품목	비율	수출업체 유형	비율
①김치	5.5	①전문수출회사	30.9
②파프리카	16.4	②수출회사 법인	27.3
③딸기	3.6	③지역농협/품목농협	1.8
④배	5.5	④작목반/작목회/영농조합	16.4
⑤유자차	1.8	⑤협회/조합/aT	3.6
⑥단감	1.8	⑥기타	10.9
⑦사과	1.8	⑦무응답	9.1
⑧백합	3.6	합계	100.0
⑨장미	1.8	수출 경력	비율
⑩국화	3.6	①5년 이내	29.1
⑪돼지고기	5.5	②5~10년 미만	34.5
⑫삼계탕	1.8	③10~20년 미만	16.4
⑬팽이버섯	5.5	④20~30년 미만	7.3
⑭새송이버섯	3.6	⑤30년 이상	3.6
⑮기타	32.7	⑥무응답	9.1
⑯무응답	5.5	-	-
합계	100.0	합계	100.0
수출규모	비율	계약물량 비율	비율
①5억원 미만	20.0	①10% 미만	9.1
②5~10억원	21.8	②10~30% 미만	10.9
③10~20억원	10.9	③30~70% 미만	21.8
④20~30억원	12.7	④70~90% 미만	16.4
⑤30~50억원	9.1	⑤90% 이상	30.9
⑥50억원 이상	12.7	⑥무응답	10.9
⑦무응답	12.7	-	-
합계	100.0	합계	100.0

은 2009년 10월 15일부터 11월 12일까지이며, 농수산물유통공사 본사와 지사의 협조를 통한 우편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조사표 배부는 2008년 수출물류비를 지원받은 업체들 중 200개 업체이며, 이중 55개 수출업체에서 응답하였다.

응답 수출업체들의 주 취급품목은 김치, 파프리카, 배, 딸기, 돼지고기, 팽이버섯, 홍삼, 무 등이다. 기타 품목이 32.7%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이에 해당하는 품목은 홍삼, 닭고기, 인삼, 막걸리, 고춧가루 등이다.

응답 수출업체의 유형은 전문수출회사와 수출회사 법인 비율이 30.9%, 27.3%로 높았고, 연간 수출규모는 10억원 미만 비율이 41.8%로 제일 높았다. 50억원 이상 수출업체는 12.7%로 나타났다.⁷⁾

수출경력은 5~10년이 34.5%로 가장 많아 수출업체들의 수출규모가 작고 수출경력이 짧은 편임을 알 수 있다.

7)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2010년 실시한 307개의 수출업체 중 5백만불 이하 수출업체 비율은 79.2%, 5백만불 이상은 20.8%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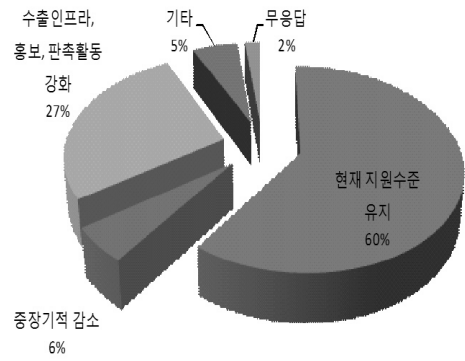


Fig. 4. Strategies to improve the competitive power.

수출물량 중 계약물량 비율이 90% 이상이라는 응답한 비율은 30.9%로 제일 높게 나타났으나, 계약물량 비율이 70% 미만인 업체 비율도 41.8%로 높은 편이었다.

2. 수출물류비 지원

WTO/DDA 협상에서 수출물류비 등 보조금 지급을 점차 감축하거나 폐지할 것에 대비하여 수출업체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노력이 요구된다. 국제 보조금 지원여건 변화에 따른 국내 농식품 수출업체의 자생력과 경쟁력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방식 변경에 대한 수출업체들의 반응은 “현재 수출물류비 지원 수준을 가능한 오랫동안 유지해주기를 바란다”는 응답율이 가장 높았고(60.0%), 다음으로 “수출물류비를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대신 수출인프라 강화를 위한 시설, 홍보 및 판촉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27.3%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공장도가격에 대한 원료비, 기타 생산비, 마진의 비율을 보면 원료비 비율이 2006년 4/4분기 40%에서 2009년 1/4분기 60%로 50% 상승한 반면, 기타 생산비와 마진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원료비용 상승에 대한 압박을 기타 생산비용 절감 및 마진 인하 등으로 완화시키는 업체들의 반응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기타 생산비 비율은 2006년 4/4분기 15%에서 2009년 1/4분기 14%로 10% 감소하였고, 마진 비율은 2006년 4/4분기 44%에서 2009년 1/4분기 25%로 43%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⁸⁾

수출물류비 지원 주체에 따라 중앙정부의 지원금액 크기와 지원방식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높았으며(56.4%,

8) 대표 품목에 대한 제조 마진임.

Table 3. Satisfaction about supporting programs (unit: %)

구 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시·군)	
	지원금액 크기	지원방식	지원금액 크기	지원방식
①매우 만족한다	7.3	20.0	5.5	3.6
②만족하는 편이다	49.1	43.6	16.4	29.1
③보통이다	25.5	21.8	32.7	20.0
④불만족한다	9.1	5.5	21.8	23.6
⑤아주 불만족한다	5.5	3.6	9.1	7.3
⑥무응답	3.6	5.5	14.5	16.4
합계	100.0	100.0	100.0	100.0

63.6%), 불만족하는 비율은 낮은 편이었다(14.6%, 9.1%). 하지만 지자체에 대한 불만족도는 각각 30.9%로 중앙정부에 비해 높게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

중앙정부 및 지자체 지원에 대해 불만족하는 이유 및 개선사항은 지원액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과 항공수송의 물류 비용을 고려한 지원과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단위별 지원이 필요, 구비서류 간소화 등으로 나타났다. 지원효과 측면에서는 개별생산자 및 수출업체간 과당경쟁을 일으켜 수출 증대의 역효과를 보인다는 의견도 있었다(Table 3 참조).⁹⁾

수출물류비 항목별 부담주체와 실질 수혜자 비율을 살펴 보면, 포장재 비용은 생산자가 부담하고 수혜를 받는다는 비율이 52.7%로 같게 나타났다. 포장재 비용을 수출업체가 부담한다는 비율은 41.8%이지만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다는 비율은 23.6%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별·포장을 위한 인건비는 수출업체가 부담한다는 비율이 40.0%이지만 실질적으로 수혜를 본다는 비율은 23.6%로 낮았다. 국내 운송비도 생산자 측면에서 부담하는 비율(27.3%)보다 수혜받는 비율(30.9%)이 높았으며, 수출업체가 부담하는 비율이(65.5%) 수혜받는 비율보다(40.0%) 높게 나타났다. 해외 운송비는 수출업체 부담비율(65.5%)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업체 수혜 비율은(36.4%)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품목별 수출실적 및 금액에 따라 물류 지원비를 차

9) 기본물류비 지원수준은 '08년 25%에서 '11년 10%로 감축됨

Table 4. Situation of subsidy program for transportation (unit: %)

구 분	포장재 비용		선별·포장 인건비		국내 운송비		해외 운송비	
	부담 주체	실질 수혜자	부담 주체	실질 수혜자	부담 주체	실질 수혜자	부담 주체	실질 수혜자
①생산자 (조직)	52.7	52.7	52.7	45.5	27.3	30.9	20.0	21.8
②수출 업체	41.8	23.6	40.0	23.6	65.5	40.0	65.5	36.4
③수입 업체	0.0	0.0	0.0	1.8	0.0	5.5	7.3	7.3
④무응답	5.5	23.6	7.3	29.1	7.3	23.6	7.3	34.5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Table 5. Opinion about differentiation of supporting (unit: %)

구 분	비율
①적극 찬성한다	21.8
②찬성한다	27.3
③보통이다	16.4
④반대한다	16.4
⑤적극 반대한다	16.4
⑥무응답	1.8
합계	100.0

등화할 경우 증기적으로 수출이 감소하거나 정체되는 품목은 수출물류비 지원이 감소하거나 폐지될 수 있고, 수출실적이 늘어나는 품목 및 업체에 대한 지원액은 늘어날 것이다. 수출 품목별·업체별로 수출실적 및 수출금액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수출업체들의 의견은 '적극 찬성' 21.8%, '찬성'이 27.3%로 찬성비율은 49.1%로 집계되었다. 반면 수출품목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도 32.8%로 적지 않은 비율이었다.

찬성하는 이유는 수출업체의 규모화와 적극적인 수출확대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 틈새시장 및 틈새시기를 노린 비전문업체의 간헐적인 수출로 인한 시장교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반대하는 이유는 모든 수출품목의 시장 진출 및 수출 성장 가능성에 대해 동일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점, 수출시장 진출 초기품목의 차별화는 수출활동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은 점, 새로운 수출품목 발굴의 유인동기가 낮은 점, 일부 특수 품목 취급 영세업체의 수출활동이 저해되는 점 등으로 나타났다.

수출 물류비 지원을 수출물량이나 금액 기준으로 지원하

Table 6. Opinion about the way of adjustment (unit: %).

구분	비율
①수출물류비 지원 항목 전체에 대해 실제 비용으로 일부 정산 방식이 좋다	21.8
②수출물류비 지원 항목 중 국·내외 물류비(운송 비용)에 한정하여 실제비용으로 일부 정산하는 방식이 좋다	14.5
③물량 기준 지원 방식으로 중앙 및 지자체가 통일하는 것이 좋다	36.4
④금액 기준 지원 방식으로 중앙 및 지자체가 통일하는 것이 좋다	16.4
⑤기타	9.1
⑥무응답	1.8
합계	100.0

Table 7. Opinion about the limitation of subsidy (unit: %).

구분	① 타당하다	②문제가 있다	③무응답	합계
응답률	61.8	32.7	5.5	100.0

Table 8. Opinion about the time-lag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MIFAFF (unit: %).

구분	① 타당하다	②문제가 있다	③무응답	합계
응답률	63.6	32.7	3.6	100.0

Table 9. Opinion about differentiation of supporting (unit: %).

구분	①타당하다	②문제가 있다	③무응답	합계
응답률	74.5	23.6	1.8	100.0

는 대신에 수출업체의 수출과정에 실제 소요된 비용의 일정 비율을 사후정산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수출업체들은 수출물류비 정산 방식에 대해서 “물량기준으로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이 36.4%로 가장 높았다. 다음에 “수출물류비를 실제 비용으로 일부 정산하는 방식이 좋다”라는 의견이 21.8%로 높았다. 반면, 국·내외 물류비용에 한정된 실제비용 정산과 금액기준 정산 방식에 대한 응답률은 낮게 나타났다.

총액한도제는 해당 품목의 수출물류비를 조사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총액이 실제 발생된 물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며, 총액한도제의 기준은 추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수출물류비 총액한도제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61.8%로 나타나 반대 의견 32.7%보다 매우 높았다.

수출 물류비 총액한도제의 경우, 총액의 일부를 지자체

가 우선 지원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0% 총액 한도제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정부가 15%, 지자체가 15%를 각각 지원하도록 한다. 다만, 지자체가 관련 예산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중앙 정부의 승인을 받아 15%보다 적게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부가 나머지 지원 금액 모두를 지원하여, 결과적으로 해당 품목 업체의 지원 총액이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한다. 이렇게 수출물류비 지원액의 일부를 지자체가 우선 지원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전액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타당하다는 의견이 63.6%,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32.7%로 나타나 수출업체의 수용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었다.

지자체의 수출 물류비 지원은 수출업체와 생산농가(단체)에 각각 지원하는 사례가 많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는 생산농가(조직)에 대한 지원에만 집중하고, 중앙정부는 수출업체의 물류비만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 타당하다는 의견이 74.5%,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23.6%로 나타나 수출업체들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원 대상 구분 방식에 대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 방안의 도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예상 문제점은 수출 감소 가능성 증대, 농가와 수출업체의 품질관리 및 물량확보 연계 가능성 저하, 지자체별 수출물류비 지원차이에 의한 형평성 문제 등으로 나타났다.

수출물류비 지원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통합하여 관리할 경우 중앙정부의 지원 예산이 수출업체(생산자)에게 지급되는 절차 중 가장 적절한 방안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 시·도 → 시·군 → 업체(생산자)” 방식으로 농수산물유통공사 본사 및 지사를 제외하는 절차와 “적절한 지급 절차가 없음”이라는 의견이 각각 29.1%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여, 수출업체들이 수출물류비 지급 절차에 유통공사를 거치지 않고 시·군·도에서 직접 지급받기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적절한 지급절차가 없다”라고 응답한 경우 대안은 품목 대표조직을 통해 지원하거나 aT 본사 및 지사를 경유하는 단계를 제외하고 직접 수출업체나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등 절차 축소를 주로 건의하고 있으며, 주요 이유는 서류의 간소화 및 전문화, 수출업체의 부담 경감, 지원창구 일원화,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지급절차 분리 등으로 나타났다.

수출 물류비를 기존의 개별 수출업체나 생산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대신, 품목별 수출 대표조직(예: 수출협의회, 수

Table 10. Opinion about paying system (unit: %).

구 분	비율
① 중앙정부 → 시·도 → 시·군 → 수출업체 (생산자)	29.1
② 중앙정부 → aT 본사 → 시·도 → 시·군 → aT 지사 → 수출업체(생산자)	16.4
③ 중앙정부 → 시·도 → 시·군 → aT 지사 → 수출업체(생산자)	23.6
④ 적절한 지급 절차가 없다	29.1
⑤ 무응답	1.8
합계	100.0

Table 11. Opinion about paying through representing organization (unit: %).

구 분	①타당하다	②문제가 있다	③무응답	합계
응답률	34.5	61.8	3.6	100.0

출선도조직)을 통하여 해당 수출 대표조직에게 수출물류비 지원 및 관리, 물류 시스템 및 인프라개선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수출물류비 지원 방식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응답이 61.8%로 높았다.

반대하는 주요 이유는 수출대표 조직의 투명하고 공정한 역할 우려, 국내 여건에서는 시기 상조임, 소규모 수출업체의 경쟁력 약화 및 자율적 조정에 역행, 지원절차 복잡화 가능성 등으로 나타났다.

3. 수출인프라 지원

수출 인프라 및 홍보관측 활동의 만족도에 대한 조사결과 지원 주체별로 중앙정부의 수출인프라 지원 만족도(41.8%)와 홍보·관측지원 활동 만족도(41.8%)가 지자체 만족도보다(각각 23.6%, 20.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인프라 시설 지원에 대한 불만족 내용은 대규모 및 전문업체 중심의 개별 지원이어서 영세업체 수혜가 미비하고 과대 경쟁을 유발한다는 점이며, 홍보 및 관측활동에 불만족하는 내용은 수출 품목별, 수출 국가별 여건을 고려한 다양하고 차별화된 홍보 및 관측활동 부족, 홍보 및 관측활동의 성과 평가 및 관련 정보 공유의 부족 등이다.

수출물류비의 인센티브 지원은 수출물류비 지원 단가를 적용하고 있지만 수출확대 장려를 위한 장려금의 성격이므로 인센티브 예산을 국가 수출브랜드 인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홍보, 관측활동비로 전환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Table 12. Satisfaction about supporting programs for infrastructure (unit: %).

구 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시·군)	
	수출인프라	홍보·관측	수출인프라	홍보·관측
①매우 만족한다	9.1	9.1	3.6	3.6
②만족하는 편이다	32.7	32.7	20.0	16.4
③보통이다	36.4	27.3	45.5	41.8
④불만족한다	16.4	20.0	20.0	23.6
⑤아주 불만족한다	1.8	5.5	3.6	5.5
⑥무응답	3.6	5.5	7.3	9.1
합계	100.0	100.0	100.0	100.0

Table 13. Opinion about conversion programs (unit: %).

구 분	①타당하다	②문제가 있다	③무응답	합계
응답률	58.2	38.2	3.6	100.0

할 수 있다. 수출물류비 지원의 인센티브 예산을 수출인프라 기반 강화사업 예산으로 전환하여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 타당하다는 의견이 58.2%로 다수를 차지했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의견은 38.2%로 나타났다.

수출업체 의식을 고려할 경우 수출물류비 인센티브 예산을 수출인프라 기반 강화 부분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 수출업체들은 수출인프라 지원 강화사업은 인센티브 예산과는 별개로 국가차원에서 기본적,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여기고 있으며, 수출물류비 예산의 홍보, 관측활동 전환 지원은 직접 수출활동을 수행하는 수출업체의 수출활동 및 수출증대 유인 동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수출업체들은 수출인프라 시설 및 활동에서 가장 시급하게 지원을 원하는 것으로 공동선별 및 포장 부문(29.1%)이며, 다음으로 수확 후 관리 및 저온유통 부문, 수출시장 개척·확대를 위한 홍보·관측활동이 각각 21.8%로 나타났다.

수출업체들은 수출인프라 지원이 가장 시급한 순위로 농축산물 수출전용 공동선별 및 물류센터(18.2%), 저온창고(14.5%), 전용 선박 및 항공기·전용 해외운송 서비스 회사(12.7%) 등으로 제시했다.

농수산물 유통공사의 수출 인프라 강화사업 중 가장 필요하고 향후 확대가 요구되는 사업은 수출농산물 안전성 관리 지원(29.1%)과 농산물 수출보험 지원(20.0%)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업에 대한 요구는 홍보 및 관측행사 지원

Table 14. Ranking of supporting for infrastructure (unit: %).

구 분	비율
①공동선별 및 포장 부문	29.1
②수확후관리, 저온유통 부문	21.8
③국내 운송 부문	3.6
④해외 운송 부문	18.2
⑤전문 인적자원 부문	5.5
⑥해외시장 홍보, 판촉활동	21.8
⑦기타	0.0
합계	100.0

Table 15. Opinion about necessities of programs (unit: %).

구 분	필요성 높은 분야 필요성 낮은 분야	
	비율	비율
①농산물 수출보험 지원	20.0	1.8
②수출농산물 안전성관리 지원	29.1	5.5
③수출현장 체험 학습장 운영	0.0	29.1
④수출선도조직 선진사례 조사	1.8	9.1
⑤선도유지제 지원	3.6	3.6
⑥농식품 포장 개선	9.1	3.6
⑦수출용 파렛트 지원	10.9	20.0
⑧홍보 및 판촉행사 지원	10.9	5.5
⑨공동대표브랜드(휘모리) 지원	5.5	18.2
⑩기타	9.1	0.0
⑪무응답	0.0	3.6
합계	100.0	100.0

(10.9%), 수출용 파렛트 지원(10.9%), 공동대표 브랜드 지원(5.5%)보다 높아 중점 지원을 위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

반면 상대적으로 지원 필요성이 낮은 사업 분야는 수출 현장 체험 학습장 운영(29.1%)과 수출용 파렛트 지원(20.0%) 등으로 나타나 사업 축소나 폐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IV. 시사점

1. 지원실태 부문

수출업체들은 수출지원과 관련하여 지원액 규모와 지원 방식에 대해 지자체의 지원 규모 및 방식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고 중앙정부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가장 큰 불만족 요인은 지원액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인데,

수출업체들은 아직도 수출물류비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정부가 향후 물류비 지원 규모를 늘려 줄 계획이므로 수출업체들의 불만족도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수출물류비 항목별 부담 주체와 실질 수혜자 비율 측면에서 수출업체의 부담비율과 수혜비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물류비용 항목별 부담주체와 수혜주체가 불명확한 편이다. 수출업체의 과당경쟁 지양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물류비 부담주체와 수혜주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수출물류비 부문

수출실적·수출금액별 수출물류비 차등지원 방안에 대해 수출업체들이 찬성하는 비율이 높지만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수출지원 실적이 적은 품목에 대해 수출물류비 지원액을 낮출 경우 신시장 개척 및 신규 품목 발굴 노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신규 수출업체 및 수출활동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반면에, 수출업체의 규모화를 유도하고 비전문업체의 일회성 수출을 억제하는 등 수출체질을 강화하는 단계에서는 차등화 지원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수출물류비 사후 정산방식은 물량기준 지원으로 중앙 및 지자체가 통일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총액한도제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도 가장 높았다. 수출물류비 지자체 선지원 및 중앙정부 후지원 방식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수출업체들은 물량기준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통일시킬 수 있는 총액한도제 실시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원활하게 정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¹⁰⁾

수출업체들은 수출물류비 지급 방식에 대해 가급적 농수산물유통공사를 경유하지 않고 지급받기를 원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품목별 대표조직을 통하여 지급

10) 2011년 총액한도제의 수출물류비 지원한도는 표준물류비의 35%를 한도로 매월 수출물량 기준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하여 지원함. 중앙정부의 지원비율은 수출물량×표준물류비의 10% 이내, 지자체는 25% 이내임. 지자체가 수출물류비 한도를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수출물류비를 감액 지원함. 수출물류비 제재기준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업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동시에 지원하는 업체에 적용하며, 수출농가 지원액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지원하되 지원비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되 수출농산물 생산 인프라 구축에산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임(농림수산식품부, 2010.12)

Table 16. Briefing of the survey results.

조사 항목	수출업체 의식
<지원실태 부문>	
지원 주체별 수출물류비 지원액 크기 및 지원방식 만족도	중앙정부에 대한 만족도가 지자체보다 높음
수출물류비 항목별 부담 주체와 실질수혜자 비율	수출업체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수혜를 보는 비율보다 높음. 대체로 생산자 수혜비율이 부담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수출물류비 부문>	
수출실적·수출금액별 수출물류비 차등지원 방안	찬성하는 비율이 높지만 반대의견도 적지 않음
수출물류비 사후 정산방식	물량기준 지원 방식으로 중앙 및 지자체가 통일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가장 높음
수출물류비 총액한도제 도입	총액한도제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수출물류비 지자체 선지원 및 중앙정부 후지원 방식	타당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나 수출업체 수용가능성이 높음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대상 구분 방식	타당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음
중앙정부 지원예산의 지급절차	농수산물유통공사 경유체계를 기피함
품목별 수출대표조직을 통한 수출물류비 지원 방식	타당하다는 의견보다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많음
<수출인프라 부문>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수출인프라(하드웨어) 시설과 수출활동(소프트웨어) 지원의 만족도	중앙정부의 수출인프라 지원 만족도와 홍보·판촉지원활동 만족도가 지자체 만족도보다 높음.
수출물류비 인센티브의 수출인프라 부문 지원 전환지원 의견	타당하다는 의견이 문제가 있다는 의견보다 높음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많으므로 시간을 두고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3. 수출인프라 부문

수출 인프라시설 및 홍보·판촉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수출인프라 지원과 홍보·판촉지원 활동 만족도가 지자체 만족도보다 높았다. 또한 영세업체도 인프라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체계 구축과 차별화된 홍보 및 판촉활동

강화 등의 개선을 바라고 있다.

수출물류비 인센티브를 수출인프라 부문으로 전환하여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동의하는 의견이 반대하는 의견보다 더 높았다. 따라서 수출물류비 인센티브 예산을 수출인프라 기반 강화 부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수출인프라 지원에서 가장 수요가 큰 부문은 공동선별 및 포장 부문, 수확 후 관리 및 저온유통 부문, 수출시장 개척·확대를 위한 홍보·판촉활동 부문으로 나타났다. 수출인프라 세부 사업 중 가장 필요한 사업은 수출농산물 안전성 관리 지원, 농산물 수출보험 지원 등으로 조사되었다.

V. 요약 및 결론

중앙정부의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 지원은 수출진흥사업 지원예산의 57.9%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사업인데, 수출업체 측면에서도 수출효과에 가장 중요하며 앞으로도 가장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는 사업이다. 하지만 보조금 형태로 지원되는 수출판매촉진사업은 과당경쟁으로 인한 수출가격 하락과 물류비지원에 의존하여 수출상품의 품질하락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아 수출기반 강화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앞으로 국제협상 결과에 따라 보조금 지원이 감축하게 되는 등 지원여건이 변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에서는 수출기반 강화를 기대할 수 있는 수출지원제도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수출지원제도 변화에 따라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대상은 수출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수출업체들이어서, 수출지원 제도개선의 부작용을 줄이고 원활하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수출업체들의 의식을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분석결과 수출업체들은 아직도 수출인프라 강화보다는 직접적인 보조를 더 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수출물류비 등 직접 보조금을 수출인프라 부문에 전환하여 지원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많아 정부의 수출인프라 강화정책은 긍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수출업체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보조금 지급이 줄어들게 되므로 제도개선 배경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 제도개선을 위해 현재 도입된 사업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정착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아직 도입되지 않은 제도는 향후 수출지원 여건 변화와 수출업체 의식 변화 단계에 따라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본 연구 수행을 위한 자료를 얻기 위해 수출업체 대상으로 조사했으나, 수출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하지 않았으며 조사 응답율이 낮은 것은 연구의 한계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¹¹⁾ 차후 연구 수행 시 표본 수를 확대하고 부류별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표본 대표성의 편의성을 줄이면서 품목별 특성이나 수출업체의 수출규모를 세심하게 고려한 구 있어야 할 것이다.

사 사

본 논문은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제도 개선 연구)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참 고 문 헌

Choi SG, Kim TH, Kim KP, Kim SG, Kim YJ, Kook SY, Kwon OB, Jung DH. 2009. *The Strategy for the Promotion of Exportation of Agro-food*. Korea Rural Economic

- Institute. [in Korean]: 48
- Eor MK, Choi SG, Choi YK. 1999. *Export Promotion Policy for Agro-Food*.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Im JB, An DH, Sung JH. 2011. Factors influencing the exports of horticultural sector in Korea. *Korean Journal of Agricultural Management and Policy* 38(1): 60-77
- Kim KP, Kim SH. 2011. The analysis on governmental subsidizing program for the distribution cost of agro-food exportation. *CNU Journal of Agricultural Science* 38(1): 173-181
- Kim KP, Han HS. 2010. *Export Promotion Policy for Fruits and Specialty Crops*.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Kim SH, Kim KP, Han HS, Song SE. 2009. *Study for the Improvement of Korea Programs to Promote the Export of Agricultural Products*.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in Korean]
- Kim BR, Park SJ. 2005. *The Study about Exporting Organizations and Programs for the Promotion of Agro-food Exportation*.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in Korean]
- Lee SS, Jung SC, Lee GN. 2010. *The Export Promoting System of Agriculture Product in Major Countries: Case of China and Japan*.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in Korean]
-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MIFAFF). 2011. *The Introduction of Programs to Promote Agro-food Exportation*. [in Korean]
- Park HH, Cho SJ. 2010. Policy issues and strategy to agricultural export insurance in agricultural exportation sector.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 Commerce* 6(2): 413-431. [in Korean]

11) 세심한 심사의견을 주신 심사위원께 감사드립니다.